

# “軍, 탄핵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의혹

### 군인권센터 “탄핵 기각 때 소요 사태 발생 대비해 논의… 진압 가능한 초법적 위수령, 즉각 폐지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시위를 대비해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

통상적 회의와 달리 최소 인원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탄핵이 인용되면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파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위수령’이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군이 위수령을 선포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시 발동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진압이 가능하다”며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도 치안은 경찰이 책임지고 방화, 약탈 등 폭동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군 투입을 논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 청와대와 군 지휘부가 군 투입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이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합참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한민구 국

방부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탄핵이 가결된 뒤인 지난해 3월13일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이 의원실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들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청와대, 군 지휘부 등이 은밀히 모의해

탄핵 부결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관련 군 지휘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색출해야 한다”며 “독재정권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시 계엄령 발동 조치를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 장명식 도의원, 고창군수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명식 도의원(60, 고창2·사진)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6.13 지방선거 고창군수 출마를 공식화 했다.



장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지난 4년 간 지역발전을 위해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등 많은 일을 했고 지역의 민의를 살려 속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이제 고창을 완전히 ‘새로운 고창’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또한 “고창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이 정체되었다”며 “이제는 힘있고 추진력이 강한 군수가 필요하다”며 당 내 활동과 중앙에의 넓은 인맥을 가진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겸 중앙당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당 내에서 쌓은 인맥과 문재인대통령선거 조직투표를 맡아 쌓은 인맥을 고창발전의 밑거름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김춘진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 복콘서트 11일 열려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 전북도당 위원장이, 그의 정치역정과 지역발전 관련 간절한 열망을 담은 ‘희망 전북, 힘 있는 도지사 : 풀꽃전북, 이제는 인생’을 펴내고, 오는 11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삼상문화회관에서 복 콘서트를 갖는다.

김춘진 전 위원장은, 전북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주역 맡아 정권교체를 이룩한 데 대한 소회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희망 전북, 힘 있는 도지사...>는 △그 해 겨울 전북의 촛불은 뜨거웠다 △나눔이 체화된 사람 △김춘진,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가 되다 △3선 국회의원의 힘 △전북의 미래를 말하다 등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성 기자

## 박수현, ‘내연녀 기초의원 공천’ 허위사실 검찰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6회 지방선거 때 내연녀를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공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8일 이 같은 글을 SNS에 올린 오영환씨를 허위사실공포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대전지검 공주지검과 충남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오씨가 SNS에 올린 이야기가 박 예비후보를 부도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당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엄중히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흑색선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증용 앞세운 불순한 정치공작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 직함을 갖고 있었다고 밝힌 오씨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촉발됐다.

오 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권력을 앞세워 내연녀를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맡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공천한 부적절함을 지적한다”며 박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뉴스

## 안희정 전 지사 기자회견 취소

### “검찰 출두 조사받겠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사 1층 로비에서 정무비서 김지은씨 등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2차 성폭행 피해 보도 등의 영향으로 각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취소를 전격 통보했다.

안 전 지사는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다”며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

는 것이 국민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 거듭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달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로는 추가 피해자가 나오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는가 하면, 공판 및 도지사 집무실도 압수수색이 예정됨에 따라 심한 정신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안 전 지사가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데 대해 충남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위축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뉴스

##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외압 수사 권성동·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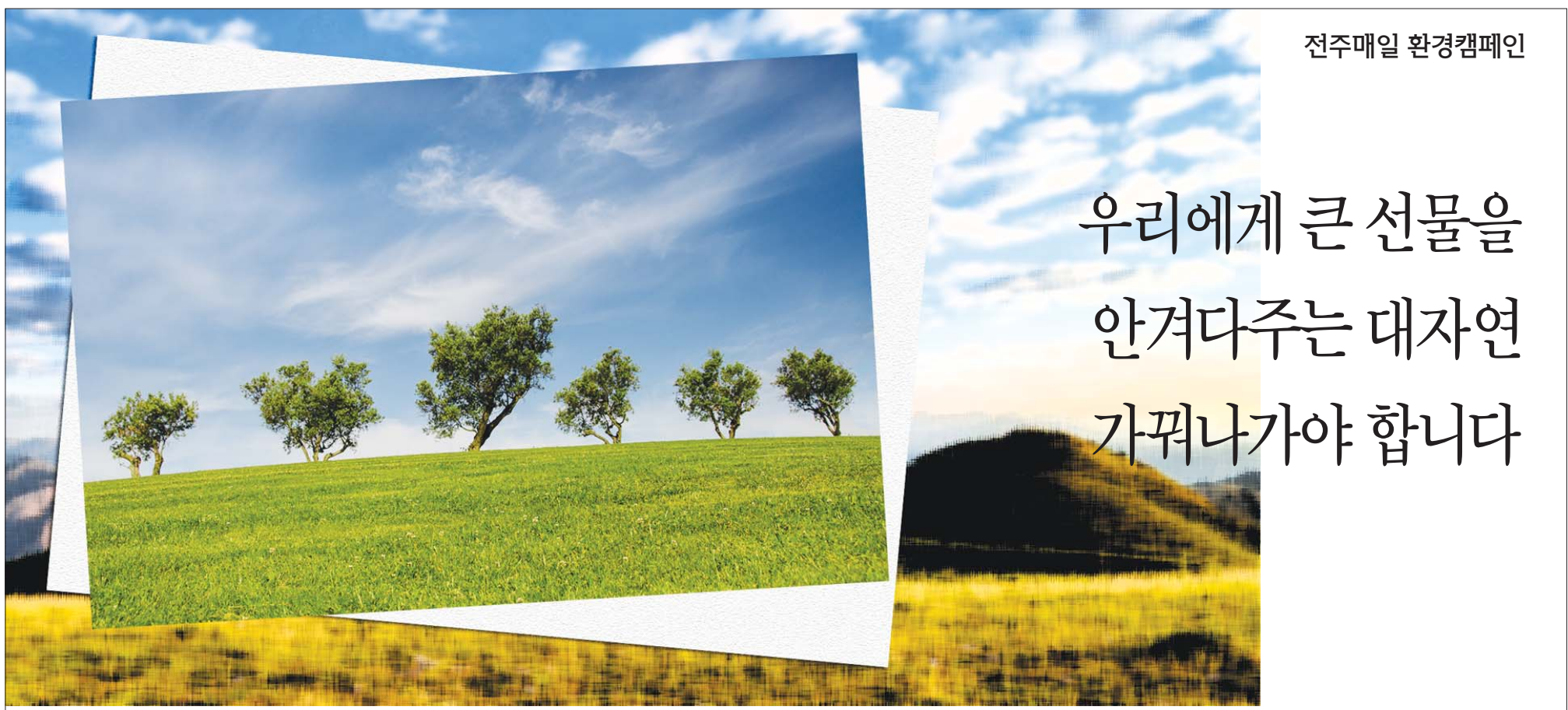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오전부터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에도 강원랜드 본사와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두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 10명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해 수사 진행과정에서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 받았고 권성동, 염동열 의원 관련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단은 안 검사를 지난달 12~14일과 이달 6, 7일 연달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단은 안 검사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 외압 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모양새다. 수사단은 안 검사를 잇달아 불러 외압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